"한미연합훈련 하는 게 맞다…의총 사안 아니다"

민주 정책위의장 당론 재확인
소상공인 대출 연장 검토 시사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한미연합훈련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뒤, "당내에서도 약간의 소수 의견, 개인 의견들은 있지만 의원총회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하는 게 맞는다는 원칙을 말했고 그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염려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또 박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책으로 대출 연장 검토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추경 지원금보다 더 급한 건 대출 연장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며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해 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검토 가능한지 협의 중"이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정 협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이어 명백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수결 원칙' 을 무기로 여당이 법안의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반대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이 언론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선 핵심공약에 '생활기본소득' 을 넣은 것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선 "그게 왜 논쟁거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박 의장은 "지난 1년간 당 2030위원회에서 복지 전문가들이 논의해 왔다"며 "공식 정책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완성된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가 공정하네, 아니네 하는 것들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17개 시도와의 관계도 있고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경기도 내에 찬반이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시 남북관계 상응조치"

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 요청

국가정보원은 3일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조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통신연락선을 통해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전했다. 또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7월 29일부터 매일 한 차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함정 간) 국제상선통신망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통신연락선 복원에 호응한 배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 간 두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당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조율 결과를 주시하며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관계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북미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가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이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관련 담화 발표에 대해선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결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간 협의와 우리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행보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뒤통수에 파스를 붙이고 있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데 대해 "패치는 며칠 만에 제거했고 흉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벼운 걸음걸이와 깊숙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들을 볼 때 건강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와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이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연기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힘 들어가자 멀어지는 제3지대

캠프 내부도 여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한 외연 확장을 표방하고 나섰지만, 전격 입당에 따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다. 국민의힘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지층 일부가 입당에 실망을 드러내거나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3일 서울 강북권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선거 험지' 인 은평갑 지역 당원 모집에도 참여했다. 전날 국민의힘 사무처와 보좌진협의회, 103개 의원실을 전부 돌아다니며 입당 신고식을 치른 데 이어 이틀째 속도감 있는 스킨십 행보를 보인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더 큰 국민의힘' 을 입당 명분으로 내걸었다. 탈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고 장외에서 한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주·전남에서 윤 전 총장을 돕기로 한 송기석 전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 정서상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면 지지 호소가 쉽지 않다"며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총장도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내 대권주자인 박 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문자메시지로 지지 철회한다고 하는 분이 많다"며 "할 수 있는 대로 다 전화를 드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내비쳤다고 한다.

캠프 내부적으로도 조기 입당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일부 인사들의 불만이 아직 해소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캠프 내 전문가 그룹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출신인 김관영·김성식·채이배 전 의원도 윤 전 총장 측의 영입 제안에 모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호남 인사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박주선 전 의원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입당 전에 중도나 일부 진보 세력과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지지 성명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연합뉴스

국힘 "예스냐 NO냐" vs 국당 "安 출마할 수도"

꼬이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협상이 감정 대립까지 얽히며 갈수록 꼬이고 있다. 국민의당 일부 인사는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오픈 플랫폼, 플러스 통합 등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냥 합당에 대해 예스(Yes)냐 노(No)냐가 중요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 예스(Yes)냐 노(No)냐 대답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11월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당을 결렬시키지 말라는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라디오에 나와 "안 대표가 지분 요구를 너무 세게 한다"며 "예를 들어 5% 있다면 5%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50%를 요구하면 거래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핵심 인사들도 언론 매체에 총출동해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저희가 현재 당세로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자존심)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다"라며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자기가 시한을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정해 버리는데, 전형적인 갑질 사고와 태도"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부족한 중도·실용 가치와 영역을 가진 정당인데, 국민의당을 깎아내리는 통합이라면 외연 확장으로도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장의 주장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분 요구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 자체가 합당 걸림돌이었다"며 "국민의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 (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융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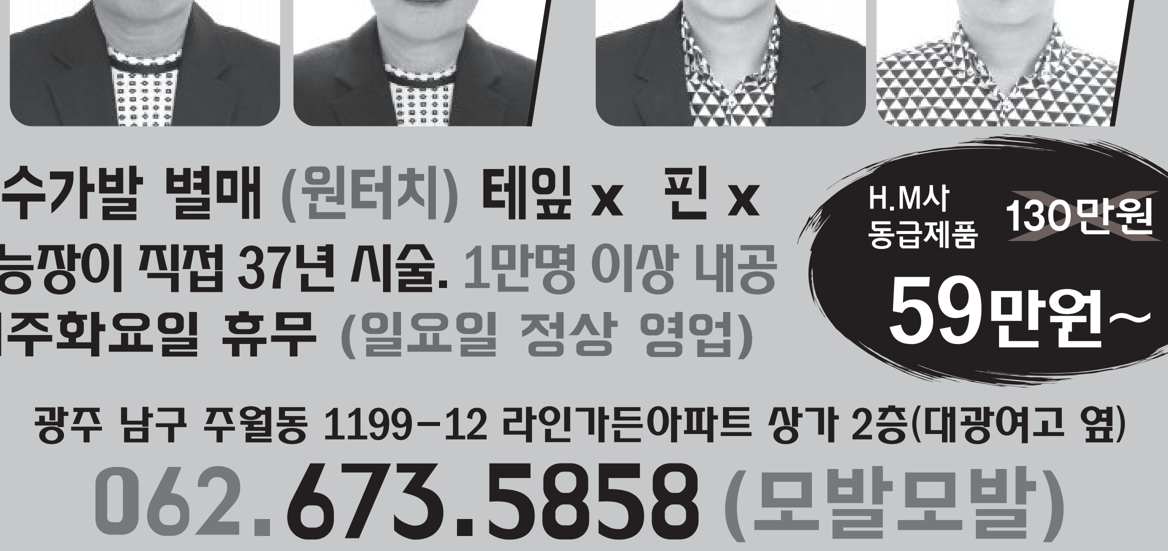
● 6층 평수 80평 매가4억5천(융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융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